

광주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지방시대위' 신설

지역균형발전특별법 후속 조치...위원 20명 구성 다음달 출범

지역혁신·자치분권협의회 흡수 통합...중장기 전략 마련 나서

광주시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책임질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는 9월 출범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달 중으로 시의회와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위원추천을 받은 뒤 광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방분권·균형발전에 전문성이 있

는 인사를 중심으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활동 영역은 지방시대 계획 및 광주시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

선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광주시 지방시대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등이다.

광주시는 이달 중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절차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신설에 따라 유사기능을 갖고 있는 광주시 지역혁신협의회와 광주시 자치분권협의회는 흡수 통합된다.

그동안 시 발전계획·시행계획 수립, 지역산업·기업육성 중장기전략, 국가균형발전 시책 심의 등을

맡아온 광주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때까지만 운영되며,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과제 개발 및 평가 등을 진행해온 광주시 자치분권협의회도 임기(2022년 3월~2024년 3월)를 조기 마감한다.

박승욱 광주시 광역협력담당관은 "현재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지방시대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9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나만의 태양계' 만들기 10일 광주시 북구 양산도서관 문화누리방에서 열린 여름방학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구와 함께하는 우리' 체험에서 초등학생들이 소품을 이용해 나만의 태양계를 만들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 영세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 절감 돕는다

배출사업장 90%가 소규모...보건환경연구원, 환경개선 기술 지원

광주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배출 절감 기술 지원에 나서고 있다. 광주에서 가동 중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90%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10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

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90%는 소규모 사업장(4, 5종)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탓에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시보건환경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소규모 사업장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주변 환경개선과 공정시험법에 적합한 환경개선에 대한 기술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은

2021년부터 진행 중인데 연 평균 30건 정도다.

주요 기술지원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 현장측정 및 시료채취 문제점 개선, 작업현장 환경관리 문제점 개선방안, 사업장 관리인 애로사항 청취·의견 교환 등이다.

서광엽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환경 기술지원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사전예방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함께 관리 등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해양분쟁 전담반 가동

해상풍력·매립지·어업권 등 해양 관할구역 소송 지원

전남도가 전담반을 꾸리고 해양 관할구역(해상경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해양 관할구역은 법적으로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지자체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형편이다.

전남도는 10일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반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담반의 경우 총괄반과 조사반으로 구성, 총괄반은 해양·법률 전문가로 이뤄진 인력지원(인력풀)을 통해 해상풍력·매립지·어업권 등 해양 관할구역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한다.

조사반은 기초지자체와 연계, 해상경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행정적 관행 등 자료조사를 담당하면서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최적안을 도출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내 17개 시도 중 11개, 226개 중 73개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1980년 이후 지자체 간 해양관할 분쟁 건수는 29건이라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외도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과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 도민의 권리 보호와 해상경계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 구축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유기농생태마을 100개소 육성"

지정시 최대 5억원 시설장비 지원...희망마을 21일까지 신청

전남도가 유기농생태마을 발굴에 나섰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유기농업 확산과 생태환경이 살아 숨 쉬는 유기농 생태마을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유기농생태마을 신규 모집을 시작했다.

유기농생태마을은 비·과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마을로,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마을이다.

비 농가의 경우 10호 이상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천 마을 중 친환경 인증 면적 10ha 이상, 유기농 인증면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3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과수 및 채소 농가는 5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천 마을 중 친환경인증 면적 1ha 이상, 유기농 인증면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30% 이상이면 가능하다.

희망 마을은 오는 21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사·군의 신청을 받은 서류심사와 현장가 현장 및 발표평가를 거쳐 9월 중 유기농생태마을로 지정할 계획이다.

유기농생태마을로 지정되면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최대 5억원까지 시설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기농 생태마을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대하고 도·농 공동체를 실천하는 농촌 모델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한 이래 올 상반기까지 49개소의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담당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